

안산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문(안)

의안 번호	1951
----------	------

발의연월일 : 2010. 02. 10.

발의자 : 홍연아 의원 외 10인

1. 주 문

- 안산시의회는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및 올바른 역사 교육 등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것임

2. 제 안 이 유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4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99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 한편,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19년이 된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50년의 침묵을 깨고 용기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유엔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를 돌며 활동했다. 1992년 1월 8일부터 17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도 매주 참석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써 ILO 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서 제2, 제3의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 역사를 교육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일본 국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본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게 하도록 일본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벌써 2/3 이상이 사망하여 이제 91명이 생존해 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한다.

안산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문(안)

안산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성노예로써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 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안산시의회는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 의

안산시의회는

1. 일본정부가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4. 일본국회각 일본군'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안산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0년 2월 22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지방의회 채택 현황 >

1. 국내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현황 (5개 시의회)

- 7월 24일 대구시의회 결의안 채택
- 9월 8일 경기도 부천시의회 결의안 채택
- 11월 30일 경남 통영시의회 결의안 채택
- 12월 24일 경남 거제시의회 결의안 채택
- 12월 24일 경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2 일본에서의 시의회 결의안(요구서) 채택 현황 (15개 시의회)

<2008년>

- 3월 25일 다카라즈카시의회 결의 채택
- 6월 25일 키요세시의회 결의 채택
- 11월 7일 삿포로시의회 결의 채택

<2009년>

- 3월 27일 후쿠오카시의회 결의 채택
- 6월 23일 미노시의회 결의 채택
- 6월 24일 미타카시의회 결의 채택
- 6월 26일 고가네이시의회 결의 채택
- 6월 30일 교타나베시의회 결의 채택
- 9월 11일 이코마시의회 결의 채택
- 9월 25일 센난시의회 결의 채택
- 10월 1일 도쿄 고쿠분지시의회 결의 채택
- 12월 14일 교토 나가오카쿄시의회 결의 채택
- 12월 14일 지바현 후나바시의회 결의 채택
- 12월 18일 구니타치시의회 결의 채택
- 12월 22일 다가와시의회 결의 채택

< 경향신문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관련 기사 >

'위안부 해결' 일본보다 못한 한국

[2009-12-22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 일 지방의회 14곳 의견서 채택... 국내선 겨우 3곳 그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일본 지방의회들의 결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 출범 후 달라진 일본의 변화는 한국 지방의회들의 뒷짐진 행태와 대조적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18일 도쿄 구니타치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4일에는 지바현 후나바시시의회와 교토 나가오카교시의회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일본 지방의회가 위안부 해결 촉구 의견서를 통과시킨 것은 지난해 3월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의회가 처음이다.

정대협은 이 같은 의견서를 통과시킨 일본 지방의회가 올해 11곳을 포함, 모두 14곳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관련 결의안 채택 후 일본 내 시민단체들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 압박하면서 동참 지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대협은 “일본사회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고, 정신대 문제에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연립정권의 집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연립정권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모두 의결을 반대했으나 최근 진행된 투표에서는 공명당 의원들도 민주당·공산당 등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일본 국민의 약 1%에 해당하는 1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정대협이 국민의 약 1%에 해당하는 50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기 시작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의회들은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눈감은 상황이다.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올해 대구·부천·통영시의회 등 3곳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제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 4일과 15일 각각 시민들이 결의안 채택 청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대협 양노자 간사는 “지방의회들의 결의문 채택이 점점 늘어나 일본 정부를 압박하면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시민들이 서명을 하며 먼저 나서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들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